
격동하는 국제통상질서와 한국

최 병 일 이화여대 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byc@ewha.ac.kr

격동하는 국제통상질서와 한국¹⁾

□ 벼랑 끝에 몰린 자유무역체제

- 대공황과 사상 초유의 전쟁으로 얼룩졌던 20세기 전반의 암울했던 세계경제를 회복과 번영의 길로 전환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자유무역체제 (liberal international order)가 흔들리고 있다. 자유무역체제의 핵심축인 “최혜국대우” (Most Favored Nation: MFN)에 기반한 다자무역체제는 그 체제의 설계자이자 최대주주인 미국의 변심으로 송두리째 흔들리고 무력화되고 있다. 1948년 출범한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체제를 강화한 1995년 출범한 WTO(World Trade Organization)의 이른바 GATT/WTO 체제의 위기는 트럼프발 신보호주의의 쓰나미가 몰려오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지만, 2016년 미국 대선에 당선된 트럼프가 추진하는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공세적, 일방적 보호주의와 격화되고 있는 미중 통상갈등은 WTO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 집권 첫째, 중국의 지적재산권(IPR: Intellectual Property Right)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개시를 명령한 트럼프 대통령은 금년 초, 중국이 IPR을 위반했다면서 미국의 중국 수입품 500만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단행했다. 중국도 물러서지 않고 상응하는 가치의 미국산 수입품에 25% 관세보복을 감행했다. 중국의 강경대응은 오히려 미국의 초강경 대응을 유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수입품 2,000만불에 10% 관세를 부과하면서 분쟁은 격화되고 전선은 확대되었다.
- 세계 경제 규모 1·2위 국가가 이 정도의 관세 조치를 동시에 주고받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5000억 달러 규모, 미국의 대중 수출이 1300억 달러 규모인 점을 생각한다면, 중국 대미 수출의 10%, 미국 대중 수출의 39%를 목표로 관세 핵폭탄을 서로 투하하는 것은 ‘무역전쟁’(trade war) 이외에는 달리 적절한 표현이 없다. 트럼프의 공언대로 추가 관세 조치가 이루어진다면 중국의 미국 수출품의 절반이 보복관세의 대상이 된다.
- 만약 WTO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면, 미국은 중국의 IPR 위반을 WTO에 제소했을 것이고, WTO의 분쟁해결제도(DSB: Dispute Settlement Body)의 결정을 기다렸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불공정 통상정책의 문제점을 WTO체제로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확신에 차 있다. 중국에 시간만 벌게 해주고, WTO/DSB 에서 중국의 패소판정이 내려진다고 해도 중국의 이행은 미온적일 것이라는 판단은 중국에 대한 그의 유례없는 초강경 관세조치의 배경이다. WTO 체제의 가장 중요한 분쟁해결절차를 최대경제국인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은 WTO 체제의 위기의 실상이다.

1) 이 글은 참고문헌에 표시된 필자의 글들을 편집, 재구성 한 것임을 밝힙니다.

□ 국제통상질서의 **New Normal**

- WTO 체제가 지향하는 “MFN에 기반한 자유무역” (모든 회원국에게 비차별적인 관세를 부과하며, 회원국이 이 관세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한 그 회원국으로부터의 수입에는 수량제한이 없다는 의미)은 트럼프의 신보호주의 공세에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1962년 미국 통상법(1962 Trade Expansion Act)의 232조항이다. 국가안보를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232조는 냉전시대의 유산이다. 냉전시대 미국에게 적대적인 국가들과의 무역관계를 제한했던 232조를 냉전이 끝난 상황에서, 미국의 적대국가가 아닌 동맹국들에게 겨냥해서 발동한다는 것은 미국이 지난 70여년간 주도해 온 자유무역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일대 사건이다. GATT/WTO 체제에서 안보 예외조항은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로 사용되어 (정확하게는, 사용을 자제해 온) 조항인데, 가장 큰 시장을 가진 미국이 그들의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로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셈이다.
- 232조를 근거로 미국이 모든 수입국에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철강의 경우, 미국의 의도는 WTO에서 양허한 철강분야 MFN 관세를 국별 quota 로 바꾸어서 철강수입의 절대량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당장 미국으로의 수출에 심각한 장벽에 부딪힌 주요수출국들은 quota라는 타협안이 WTO 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임에도, 공동연합전선을 결성하여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보다는 개별국가 차원의 무관세 물량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에도 232조를 적용하여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 다음, 개별국가와 협상을 통해 수출 제한적 quota를 설정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미국이 WTO체제의 가장 근본원칙인 MFN을 손상시킨다면, 다자무역체제는 존재이유가 없어진다.
- 트럼프 취임 후 불과 2년의 기간 동안 지난 70년간 지속되어 온 다자무역체제는 심각할 정도로 무시되고 훼손되었다. “America First”를 외쳐대는 트럼프에게 지금까지 다자무역체제라는 공공재(global public goods)를 제공해 온 과거 미국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다. MFN에 기반한 자유무역체제는 힘의 논리를 앞세우는 미국에 의해 관리무역체제로 변화하고 있고, 다자체제는 무력해지고 미국이 주도하는 양자적 통상관계가 압도하고 있는 이른바 New Normal이 지금의 국제통상체제의 모습이다.

□ 미·중 무역전쟁, 어디까지 갈 것인가

- 미·중 무역전쟁이 어떤 경로로 진행될지, 어떤 결말을 향해 나아갈지 예측하긴 쉽지 않다. 그러나 두 가지는 예측 가능하다. 첫째, 미·중 무역전쟁은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다. 둘째, 미·중이 타협하더라도 그것은 휴전일 뿐 종전이 아니다.

- 트럼프에게는 하루 10 억 달러에 달하는 대중 무역수지 적자를 감소시켜 어떤 미국 대통령도 해내지 못한 '해결사'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의 재선도 여기에 달려 있다. 트럼프의 재임 기간에 대중 무역수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수출입 물량 제한밖에 없다. 이 경우, 중국은 미국산 수입을 늘리기 위해 한국산 수입을 줄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트럼프가 무역수지 적자 해소 약속을 중국으로부터 받아내고 승리를 선언해도 미국 여론은 싸늘할 것이라는 점이다.
-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의 개혁 개방의 실질적 후퇴, 정치 억압의 강화 속에 중국이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도발과 도전을 공식화하자, 미국 파워 엘리트들은 그간 중국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이 비현실적이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 강경론에 초당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미국 내 외국인 투자 심사를 한층 강화하는 입법안을 통과시켰다. 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인수합병만 선별적으로 심사하던 제도는 기술 관련 신규 투자까지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미·중 무역전쟁에 부정적이던 미국 기업들도 “중국제조 2025”로 대표되는 중국의 산업정책은 불법·탈법·불공정하다는 강경 기류로 전환했다.
- 중국 시스템이 더 개방적·개혁적 방향으로 선회하지 않는 이상 어떤 협상도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 중국은 자국의 핵심이익에는 타협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기술 자립을 목표로 하는 ‘중국제조 2025’는 정당한 산업정책이며, 미국의 지나친 간섭은 용납할 수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숫자는 조정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이 중국의 일관된 입장이다.

□ 미·중, 냉전시대로 진입

- 10 월 4 일 허드슨 연구소에서 연설에서 펜스 미국 부통령은 지난 40 년간 미국의 대중국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선언했다. 그는 중국이 각종 불법행위로 미국 경제를 침탈하고 미국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비난하면서, 중국을 미국의 경제와 안보를 위협하는 패권국가로 규정했다. 그의 인식은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첫해 12 월 발간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에서 중국을 미국과 경쟁하는 패권국가로 규정한 인식의 연장선상에 있다.
- 펜스는 이 연설에서 중국학자와 유학생들이 미국 내 중국의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들은 수시로 미국 언론에 보도되곤 했지만, 미국 권력의 최상층부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작심발언했다는 것은 미중관계가 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12 쪽에 이르는 그의 연설은 미국의 대 중국 냉전선언 포고문이다.

6 세계의 기조연설과 Q&A

- 중국도 미국과의 무역분쟁의 본질이 패권경쟁임을 이젠 더 이상 숨기지 않는다. 이번 10 월, 홍콩-마카오-주하이로 연결하는 세계 최장 다리 개통식에 참석한 시진핑 주석은 자립을 역설했다. 세계통상체제와의 연결고리를 더 단단하게 하는 개혁개방이 아닌, 중국이 자력갱생할 수 있는 자립을 강조했다는 것은 미국과의 길고 험한 싸움을 중국 스스로 각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미중 무역전쟁 발발 초기에 중국은 미중간의 갈등이 무역문제로 국한되길 희망했던 중국은 이제 없다.

□ 미국의 중국 봉쇄령

- 금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40 주년인 해이기도 하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지도 없는 여정”이었다. 1989 년 천안문 민주화시위를 공산당이 무력으로 진압한 이후, 중국은 위기에 처했다. 세계는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고, 중국 집권세력 내부에서는 개혁개방 노선에 대한 회의론이 고개를 들면서 홍전갈등이 격화되었다. 중국이 가야 할 길이 불투명해진 그 암울한 상황에서 1992 년 덩샤오핑은 선전, 주하이 등 남방경제특구를 찾아가 지속적인 개방과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담화를 발표하면서 공산당 지도부를 압박했다. 머뭇하던 중국은 다시 뚜벅뚜벅 개혁과 개방의 길로 걸어가기로 결정했다. 개혁과 개방의 모멘텀은 간신히 유지되었다. 그 길은 2001 년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이어졌다.
- 2001 년 WTO 가입 후, 중국의 무역성장세는 거침이 없었다. 세계최대의 시장인 미국에 다른 국가들과 같은 조건으로 시장접근을 획득한 중국은 질주에 질주를 거듭했다. 2007 년 독일을 제치고 세계 3 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했고, 2010 년에는 일본을 제치고 세계 2 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21 세기가 시작될 때, 미국경제의 10% 규모이던 중국은 이제 70% 규모로 까지 치고 올라 왔다. 중국의 WTO 가입은 결과적으로 중국의 초고속질주를 가능하게 한 초고속도로였다.
- 미국은 이제 와서 중국에게 그 고속도로로의 진입을 허용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 15 년에 걸친 중국과의 가입협상을 통해, 비싼 통행료를 받아내었고 과속운전, 반칙운전 안 하겠다는 다짐까지 중국으로부터 받아내었다. 하지만, 과속과 반칙을 적발해야 하는 경찰력은 무능하고, 과태료는 터무니 없이 싸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해도 중국은 “당신들도 예전에 반칙했는데, 왜 나만 못살게 구느냐”고 항변하면서 납부를 거부한다는 것이 미국의 생각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고속도로에 더 많은 경찰과 순찰차를 투입하는 것으로는 중국의 난폭주행을 막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을 그 고속도로에서 끌어내릴 수도 없다.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설계하고 확장하는데 가장 많은 지분을 투자해 온 고속도로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는 국가들에게만 진입을 허용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려고 한다. 중국을 세계통상체제에서 고립시키는 것이 그 목표이다.

□ 미중 무역전쟁의 본질은 패권경쟁

- 금년 초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상대로 관세폭탄을 투하하고 시진핑 주석도 물러서지 않고보복관세로 맞대응 하면서 미중무역갈등이 폭발하자, 세간의 관측은 트럼프는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 해소, 중간선거를 목표로 하고 있고, 관세부과로 대결하는 것은 상호파괴적이며 인상할 수 있는 관세 폭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속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관측과는 달리, 미중 무역분쟁의 수위는 계속 높아졌고, 전선은 확대되어 왔다. 빛나간 관측은 중국과의 갈등수위를 높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집행자들의 전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탓 때문이다.
- 미국은 중국이 더 강력해지기 전, 그 기세를 꺾으려고 작심했다.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을 다루면, 중국의 난폭운전, 광폭질주는 계속되고, 어느 순간부터는 미국도 막을 수 없는 상황으로까지 내몰릴 것으로 미국은 우려하고 있다. 이점에 대해서는 미국내 초당적인 합의가 형성되어있다.
- 미국은 중국과의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을 차는 것과 같다고 생각한다. 공정해야 할 심판은 외국선수들에게 편파적으로 불리하게 판정하고, 수시로 경기장에 뛰어 들어와 자국선수들에게 유리하게 공을 몰아준다는 것은,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모든 외국 기업인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이 시스템을 그대로 유지하는 한, 중국의 질주는 계속되고 미국의 패권은 위협받는다라는 생각이 미중무역전쟁의 바닥에 깔려 있다.
- 트럼프발 중국고립전략은 9월말 타결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에서 극명하게 나타나있다. 협정 32 조 10 항에 따르면, “미국, 멕시코, 캐나다 3 국 중 하나가 비시장경제국 (NME: non-market economy)과 FTA 를 체결하는 경우, 다른 두 국가는 삼국간의 협정을 종료하고 양자간 FTA 로 대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대상이 중국이라는 것은 중국이 더 잘 알고 있다. 중국은 이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무역수지를 대규모로 축소하고, 불법보조금을 금지하여 중국방식의 기술산업정책 (중국제조 2025)을 폐기하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 “숫자는 협상할 수 있지만, 시스템은 협상대상이 아니다”라고 맞선 중국을 겨냥한 중국 봉쇄령은 이제 시작이다. 이제 국제통상질서는 미국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중국 편에 설 것인가로 양분화 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 중국의 기술굴기, 기존 통상질서 도전

- 세계 최고의 기업인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은 중국에서 철저히 차단, 봉쇄되고 있다. 대신 중국은 그들의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을 만들어 내었다. 바이두, 알리바바, 텐센트가 바로 그들이다. 중진국 수준에 도달한 13억 중국시장의 빗장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중국기업에게만 활동공간을 허용한 디지털 산업에서 중국은 세계 최고의

기업, 세계 최고의 창업기업을 키워내는데 성공했다. 중국은 더 이상 짝퉁, 싸구려를 만들어 내던 그 중국이 아니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으로 선화했던 중국의 “이념 보다는 실용”의 최전진 실험기지였던 선전은 이제 세계 IT 기업들의 메카가 되었다. 세계 드론시장의 강자 DJI, 세계최대규모의 통신회사인 ZTE, 화웨이, 세계 최대규모의 인터넷 기업 텐센트가 자리잡은 선전은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운다. 한적한 어촌이었던 선전은 40 년만에 200 미터가 넘는 초고층 빌딩이 10 개 (중국 최대)가 넘는, 인구 1200 만 규모의 초거대 혁신창업도시로 변모했다. 홍콩을 경제규모를 앞질렀다는 선전은 창업과 혁신의 열기 속에 매일 아침을 연다.

- 세상은 새로운 기술변화의 변곡점에 서 있다. 빅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융합되면서 상상 속에 있었던 것들이 현실세계 속으로 들어오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등 4 차산업혁명으로 명명된 역사적 변곡점에서 중국은 가속 패달을 있는 힘을 다해 밟고 있다. 중국은 이 기회를 결코 놓칠 수 없다. 19 세기 후반 “서세동점”의 거센 물결 속에 삼켜졌던 중국의 ‘150 년 굴욕’의 세월을 끝낼 수 있는 순간을 잡았다고 그들은 판단한다. 1978 년 후 지금까지의 경제실험이 “추격전”(따라잡기) 였다면, 역사의 커브 길로 접어든 이 순간 이제는 추월하여 전세를 뒤집으려고 한다. 임기제한을 철폐한 시진핑 주석은 2035 년 까지 ‘사회주의 현대화국가’ 건설이란 로드맵을 제시했다. 중국인민공화국 건국 백주년이 되는 2050 년까지 세계최강선진국 실현한다는 중국몽(中國夢)의 중간단계인 이 목표 실현의 핵심은 기술대국 중국이다. 이미 중국은 “제조업 2025”란 목표를 설정하고, 기술자립화를 시도해오고 있다.
- 중국의 기술굴기가 강력할수록 기존 국제통상질서에 대한 회의도 짙어간다. 외국과의 경쟁을 차단하고, 정부보조금을 마구 뿌리고, 자국시장에 진입한 외국기업에겐 교묘한 방법으로 불이익을 주는 중국식 기술굴기는 기존 국제통상질서의 유효성에 강한 회의를 심어주고 있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의 바로 그 피해자들이다. 전 기차 배터리 보조금 약속을 믿고 중국에 공장을 세운 삼성 SDI, LG 화학은 기술력이 훨씬 뒤떨어지는 중국 배터리 업체에게 시장을 빼앗겼다. 이런 저런 규제를 내세우는 중국정부를 감당할 수 없었다. 지금까지 한국정부는 이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조차 주저해 왔다.

□ 미·중 무역전쟁은 한국의 위기

- 미·중 무역전쟁은 트럼프 때문이라는 것이 중국 측 주장이지만, 트럼프의 선전포고 원인은 중국이 제공했다. 미국이 애써 가꾸어 온 다자자유무역체제 안에서 중국과의 갈등 해소를 포기하고, 전면적 양자 관계로 돌파하기로 작정한 것은 세계 무역 질서가 질서에서 혼돈으로, 규범에서 힘의 논리로, 자유무역에서 관리무역으로 이동했음을 의미한다. 미국과 중국이 자신의 목표를 위해 기존의 규범과 제도를 무시하고 힘으로 상대국을 몰아붙이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로 이미 들어섰다. 뉴노멀의

태동은 중국을 최대 무역 상대국으로, 미국을 안보 동맹이자 최대 시장으로 둔 한국의 생존 방식에 근본적 변화를 요구하는 전환기적 사건이다.

- 정치체제는 다르지만, 경제적인 동기에서 의기투합했던 한·중 무역관계는 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는 관계에서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려는 경쟁 관계로 변화했다. 동맹을 넘어 혈맹이기 때문에 통상관계에 불협화음이 있어도 동맹은 튼튼하다는 한·미 관계는 이제 과거 기억이 되었다. 미국에서는 대중 영합적인 보호주의 강풍이 불고, 중국에서는 ‘중화 민족주의’ 역풍이 거세다. 보호주의와 민족주의 강풍이 언제쯤 사그라지지 쉽게 가늠할 수조차 없다. 미·중 무역전쟁이 어느한쪽의 승리로 끝난다면 그것은 보호주의 또는 민족주의의 승리를 뜻한다. 글로벌 통상국가 대한민국에겐 어느 쪽도 불안한 결과다.

□ 한국은 New Normal 시대 전략은 무엇인가?

- New Normal 의 거센 광풍은 언제까지 계속될 것인가? 미중 패권경쟁의 가속화, 미국정치의 인기영합주의, 중국의 경제민족주의화의 거대 조류 속에 세계경제질서의 New Normal은 상당기간 지속될 것이다. 세계는 미국이 떠나 간 자유무역체제의 미래를 어떻게 감당할 것 인가. 세계 2 위의 경제대국 중국은 미국대신 자유무역체제를 미국 대신 이끌어 갈 비전과 능력을 기대할 수 없다. 미중간의 격돌로 흔들리고 있는 국제통상의 기반.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 흑한의 추위 속으로 들어간 한국경제를 그런대로 버티게 해 준 통상마저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 그 휘청거림은 잠시 후 지나가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무역의 1/4 이 향하는 중국, 세계최고의 기술 경연장인 미국, 세계최고의 시장으로 변신하고 있는 중국. 미·중 무역전쟁의 포성이 요란하지만 많은 한국 기업은 지금도 중국이 기회라고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있다. "시장을 나누어 줄 테니 기술을 넘겨라"는 중국 방식을 그들은 수용한 듯하다. 한국 산업 전체가 송두리째 침몰할 수 있는 위기 가능성보다는 눈앞의 이익이 더 급하다. 산업을 책임져야 할 국가는 뻔히 보이는 중국 리스크를 제대로 경고하고 있는가. 나중에 중국 리스크가 현실화될 때 중국에 제대로 따질 배짱도 없으면서 말이다.
- 미국과 중국이 그간 공존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역확대를 통한 중국의 성장이 결국에는 중국의 정치적 자유를 가져올 것이라는 미국의 신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때문에 미국은 중국의 WTO 가입을 허용했고, 중국을 최종조립지로 하는 글로벌가치사슬이 형성되었다. 미국은 그 가치사슬에서 핵심기술 공급과 최종 소비시장의 역할을 담당했다. 신냉전의 시작은 그러한 신념 자체가 무너졌음을 의미한다. 기존의 글로벌 가치사슬은 와해될 운명에 처해 있다. 이점을 간과하면 신냉전시대에 살아남는 어떠한 전략도 세울 수 없다. 바로 이런 이유로 미국과 중국 어느 편에도 서지 말고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은 구한말의 중립론 처럼 비현실적이고 허무하기까지 하

다. 미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국이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국은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 미·중간의 무역 격돌, 신냉전의 시작은 한국에게 중국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성찰을 요구한다. 한중수교 이후 처음 20 년간의 상호 호혜적인 통상관계 (마늘과동 같은 갈등도 있긴 했지만)는 중국이 한국의 기술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한국은 어느 선진국 보다 먼저 중국에게 WTO 협정에서의 “시장경제지위”를 인정해 주었다. 2005 년 노무현 정부 때 내린 통 큰 결정이었다. 규모 1000 억 달러를 넘는 국가로서는 최초의 결정이었다. 한국이 누리고 있던 대중무역수지 흑자, 중국시장 선점,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의 협조 등을 고려한 결정이었다. 그런 결정에는 중국이 지속적인 개혁과 개방의 방향으로 나아가리라는 기대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런 기대는 충족되지 않았다. 최근 THAAD 배치에 대한 중국의 무역보복은 중국의 민낯을 보여주었다. 디지털 기술혁명의 세계사적인 물결을 타고 중국은 한국을 넘어서려 한다. 한중 통상관계는 협력에서 경쟁으로 변화했다.
- 세계 최고의 성장세를 구가하는 중국시장을 결코 놓칠 수 없다는 “여전히 중국은 약속의 땅”이라는 주장은 너무나 비전략적이다. 세계 최고의 시장으로 변화하는 중국은 선택이 아닌 상수라는 기업의 생각이 현실로 되려면, 중국과 격차를 확보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지속적인 추진이 있어야 가능하다. 정치의 그림자가 더 짙게 어긋거리는 중국에서, 과연 가능할 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은 부족하다. 이 문제라면 발벗고 나서서 불확실성을 해소해주어야 할 한국정부는 저자세로 일관해 왔다. 한국에 진출하는 중국 기업, 기술에 대한 국가적 정책도 실종상태이다.
- 중국산의 저가물량공세에 싸다고 무조건 쓰다간 툭툭히 대가를 치를 수 도 있다는 전략적 고려를 정책당국은 하고나 있는지 알 수조차 없다. 안방시장을 무기로 세계 최대 통신 기업이 된 화웨이는 이미 오래 전부터 한국 기간통신망에 그들의 장비를 판매하려고 공 들이고 있다. 서구 선진국에 요란하게 울리고 있는 화웨이 경계경보는 아직 한국에는 없다. 중국을 시장으로만 간주하는 어설픈 기회론으로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수 없다. 경쟁력만 있으면 문제없다는 기술 만능주의 역시 본질을 호도한다. 우물쭈물하다간 한국은 중국에서 기회도 잃고 무시당하는 그런 국가로 전략할 우려가 있다. 그 우려를 불식하려면 대중국 기술경쟁전략 수립부터 먼저 세워져야 마땅하다. 그 전략은 산업현장과 통상, 안보, 외교가 모두 연결되는 청사진이어야 한다.
- 어설픈 중립론도, 맹목적인 중국기회론도 난세에 한국을 구하기엔 턱없이 부족하다.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기댄다는 지금까지의 “안미경중”(安美經中)론은 유통기간이 지난 패러다임이다. 한국이 통상 대국으로 질주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다자 무역체제, FTA 로 맺은 통상 네트워크는 트럼프의 배신과 시진핑의 위선에 흔들리고 있다. 보호주의와 경제 민족주의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의 방어벽은 너무나 낮고 취약하다. 한국 정부는 지금의 미·중 무역전쟁을 분절적·과편적·

미시적 시각에서만 대응하고 있다. '경제 안보=국가안보'로 접근하는 미·중의 무역전쟁 속에서 북핵을 해결하고 경제를 회복해야 하는 무역 대국 한국은 경제 따로, 안보 따로다. 한국정부의 '신북방, '신남방'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New Normal 시대의 속성을 꿰뚫어 보는 고민과 성찰이 있어야 생존전략이 만들어 질 것이다. New Normal 시대, 한국은 난파하지 않고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참고문헌>

최병일, “국제통상질서의 New Normal”, 외교 2018

“최병일의 퍼스펙티브: 미중 신냉전 시작하는데 한국은 속수무책”, 중앙일보 2018. 11. 4

“최병일의 퍼스펙티브: 미중 무역전쟁 대처할 한국 생존전략 안 보인다”, 중앙일보 2018. 8. 20

“최병일의 퍼스펙티브: 미중은 기술전쟁 본격화... 한국은 강건너 불구경”, 중앙일보 2018. 6. 11

최병일 “새로운 국제통상질서와 한국”